

...총론

## 한국 시민운동의 역사와 쟁점

김정훈

### 만회혁명과 시민운동

17대 총선이 끝났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17대 총선은 지난 대선  
의 연장선에 있었고, 이 선거에서도 개혁세력이 승리함으로써 이제 한국 정  
치는 정상화의 도정에 오르게 되었다. 1987년의 과제가 마감되고 지금에서  
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이번 선거가 만회혁명이었다는 사실은 이번 선거의 이슈가 민주 대 반민  
주, 상식 대 몰상식의 구도였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리고 혁명은 바로 이러  
한 대립구도가 드디어 해체되었음을 의미한다.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겠지  
만 이제 우리 사회는 상식과 민주주의 사회로 분명히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2004년에 드디어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가 해체되고 새로운 시작이 이루  
어진다는 사실은 역으로 민주화 이후의 과제가 아직 제기조차 되지 못했음  
을 의미한다. 그것은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로의 전환이 아  
직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뿐 아니라 근대적 정치지형이 담지 못하는 새로운 문  
제가 아직 본격적으로 제기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것은 시민운  
동에도 새로운 과제를 제기한다. 시민운동 역시 민주 대 반민주, 상식 대 몰

상식의 구도 내에서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제 시민운동의 본격적인 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 시민운동과 민중운동

엄혹한 독재의 시기, 민주를 추구했던 세력들은 민주화 운동, 민중운동, 민족민주운동 등 다양한 이름을 가졌지만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구도에서 단결할 수 있었다. 폭압적인 독재권력이라는 명확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항세력의 요구는 민주화로 단일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화에 대한 요구는 단일한 것이 아니었다. 그 저항세력의 다양함만큼이나 다양한 요구들이 민주에는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민주화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포함하는 것이었다. 합리화의 요구와 민중화의 요구가 그것이다. 합리화의 요구란 근대적 합리성의 추구를 의미한다. 전근대적 연고주의에 의한 부정부패, 이성보다는 생존의 논리에 입각한 반공주의 등의 전근대적 의식을 청산하려는 합리화의 요구는 민주화 요구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또한 이러한 합리화의 요구와 함께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민중화의 요구이다. 이는 한마디로 권력의 하향화를 의미한다. 기득권 세력의 권력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비기득권층이 나누어 갖는 것이야말로 민주화 요구의 또 하나의 핵심이다.

1987년 민주화는 이러한 두 가지 요구 중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성취하지 못했다. 민중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엘리트 간의 협약에 의해 귀결된 민주화의 성격으로 인해, 우리의 민주화는 '제한적 민주화' 혹은 '배제적 민주화'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는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유지될 수밖에 없었다.

돌이켜 보면 1987년의 민주화 이후 최근의 총선거까지 민주 대 반민주의 구도는 여전히 시민에게 가장 호소력 있는 균열구조였다. 그러나 제한적으로나마 이루어진 민주화로 인해 새로운 공간이 생기고, 새로운 운동방식이 나

타날 수 있었다. 거시적으로 볼 때, 민주화가 만들어 놓은 새로운 공간에서 한국의 사회운동은 1차 분화를 시작했다. 민주화 운동으로 단일화되어 있던 운동세력들이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 크게 보면, 시민운동과 민중운동으로 분화한 것이다.

정치적 개방이 만들어 놓은 공간에 제일 먼저 진출한 것은 노동운동이었다. 1987년 여름의 노동자 대투쟁을 통해 한국의 노동자 세력은 본격적으로 스스로 조직되기 시작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던 순종적인 노동자들은 억압의 강도가 강했던 만큼 그 억압의 끈이 약해지자 스스로 통제를 풀어 헤치고 나타나게 되었다. 우리 역사상 가장 대중적인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은 새로운 정체성, 즉 노동자 정체성을 형성하기 시작했고, 이와 함께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조직이 건설되었다. 전노협, 민주노총으로 이어지는 노동조합의 건설사는 노동자 계급의 형성사였고, 그 연장선상에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이 있을 수 있었다.

노동자 계급을 비롯한 기층민중운동의 성장은 민주화의 요구 중 민중화의 요구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민중운동은 경제권력 및 정치권력의 재구조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했으며, 이런 의미에서 기득권 집단의 이해를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세력이었다. 따라서 민중운동은 기득권 집단의 지속적인 억압대상이었다.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된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과 그에 대한 노동자들의 극한적인 투쟁은 민중운동세력에 대한 기득권 집단의 억압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증명하지만, 이는 역으로 이들에 대한 기득권 집단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또한 증명한다.

민중운동은 국가 및 기득권 집단의 지속적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운동 중 최고의 동원력 및 영향력을 가진 조직으로 성장하였다. 민주노총, 전농 등의 단체들은 시민운동이 보여 줄 수 없는 대중동원력과 영향력을 보여 주고 있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은 이 세력이 한국 사회의 주도세력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시민사회운동의 1차 분화의 또 하나의 주체는 시민운동이다. 80년대 말 새롭게 나타난 시민운동은 80년대까지의 민주화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민주화 이후의 변화된 정세에 적응하려는 운동형태라 할 수 있다. 민중운동세력이 민주화의 요구 중 민주화를 핵심으로 한다면, 시민운동은 합리화를 핵심으로 분화되었다.

시민운동이 합리화 추구세력이라는 점은 현재적 시민운동을 최초로 제기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창립에서도 잘 나타난다. 경실련이 제기한 토지공개념은 바로 경제적 합리성, 혹은 자본주의적 합리성을 요구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어서 나타난 참여연대 등 다양한 시민운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사회영역에서의 합리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sup>1</sup>

사회운동의 1차 분화는 내용적으로 볼 때, 합리화와 민주화의 분화로 볼 수 있지만, 형태적으로 볼 때, 부문운동으로의 변화로 볼 수 있다. 즉 민주화까지 운동을 이끌어 왔던 전국적인 전선조직은 민주화 이후 점차 해체되고 각 부문별 조직들이 보다 활성화되게 된다. 운동은 노동운동, 농민운동, 환경운동, 정치개혁운동, 경제민주화운동 등으로 분화되게 되고 연대는 상시적인 전선조직보다는 일시적이고 이슈 중심적인 조직으로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한국사회운동의 1차 분화과정에서 탄생한 한국의 시민운동이 성장하는 데는 시민운동이 제기한 이슈의 현실적합성이 중요한 원인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민중운동과 비교해 볼 때, 기득권 집단의 특혜 역시 중요한 원인이다. 기득권 집단은 시민들의 개혁요구를 적절히 수용하면서 근본적

---

1 시민운동에는 이러한 합리화의 요구와 함께 탈근대적 요구가 중첩되어 있다. 즉 환경운동, 여성운동에서 알 수 있듯이 신사회운동적 과제가 접합되어 있다. 따라서 시민운동과 근대적 요구인 합리화 요구를 등치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 다만 환경운동, 여성운동 등이 2000년 총선연대 등의 활동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운동도 한국적 맥락, 즉 '비동시성의 동시성'을 특색으로 하는 사회에서 합리화의 요구와 신사회운동적 요구를 동시에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한국의 시민운동은 세계사적으로 독특한 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인 변혁요구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었고, 권력의 분점을 요구하기보다는 합리화를 추구하는 시민운동세력은 그들의 이해관계에 적합한 세력이었다. 국가의 차별적 태도, 그리고 언론의 편향적 보도태도 등은 시민운동이 민중운동에 비해 '특혜 성장' (?)했음을 보여 주는 징표라 할 수 있다.

이렇게 한국의 시민운동은 한국적 맥락에서 성장했다. 따라서 한국의 시민운동은 그 방향과 성격에 있어 구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즉 국가와 기독교 집단이 시민운동세력을 선택적으로 '수용' 했다고 할지라도, 국가와 기독교 집단에는 한국적인 정치구조와 한국적 자본주의의 비합리성과 파행성, 천민성이 각인되었던 것이며 이는 시민운동의 비판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다른 측면에서 한국 권력의 중앙집중성은 역으로 그것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세력의 중앙집중성을 낳았다. 즉 한국의 시민운동은 기독교 집단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피할 수 없었으며 또한 중앙중심적 성격을 갖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시민운동과 기독교 집단의 밀월관계는 결별의 시간만이 문제인 관계였다. 이는 무엇보다 한국의 기독교 집단이 비합리적인 특권에 의해 성장한 집단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독교 집단 형성사는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사와 같은 것이다. 즉 한국의 시민사회가 일제 시대부터 근대적 분화 경향과 국가로부터의 탈분화 경향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면, 한국의 기독교 집단은 이러한 국가로부터의 탈분화의 수혜세력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국가는 시민사회 내에 관변단체와 어용언론을 형성했으며, 경제부분에는 재벌세력을 만들어 냈다. 이렇게 한국의 기독교 집단은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대신 보호와 특혜를 받은 세력이었고, 이를 통해 엘리트 카르텔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민주화를 통해 시민운동이 등장한 것처럼, 한국의 기독교 집단은 민주화 이후 전면화하였다. 과거 독재정권 시기에는 국가가 나서서 이들의 이익을 독점적으로 보장해 주었지만,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국가에 의한 억압적

통제가 더 이상 이루어지기 힘들어지면서 이들은 스스로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전면화하였다. 독재정권 시기 동안 사회 각 영역의 제도권력을 장악했던 이들은 이러한 물질 토대를 기반으로 헤게모니적 통제를 시작하였다. 한국 시민사회의 보수성은 바로 기득권 집단의 강력한 물질기반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기득권 집단의 형성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기득권 집단의 관행이 너무나 비합리적이었기 때문에 시민운동과 이들의 대결은 불가피했다. 한국의 기득권 집단은 합리적 인사관행, 합리적 경제관행 그리고 합리적 소통구조 그 어느 것에서도 정상적이지 못했다. 기득권 집단은 연고주의, 부정부패의 연쇄사슬고리를 갖고 있었으며, 따라서 그들은 시민사회의 개혁요구를 적절히 수용하지 못했다. 그들은 여전히 반공주의, 지역주의, 성장지상주의를 통해 시민사회를 통제하려 했으며, 이러한 비합리적 관행과 의식에 의한 지배를 포기하려 하지 않았다.

2000년 총선에서의 낙천낙선운동은 기득권 집단과의 최초의 전면 대결이었다. 이 운동은 기득권 집단의 제도적 방파제였던 의회권력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였고,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호응 속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러한 총선연대의 활동 이후 경제개혁문제, 언론개혁문제, 의료과업문제 등에서 시민운동과 기득권 집단은 전면전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기득권 집단의 공격은 시민사회 내의 제도적 공론영역을 장악하고 있던 보수언론에 의해 이루어졌다. 보수언론은 홍위병 논쟁 등을 통해 시민운동의 도덕성과 공익성을 흠집내려고 했다. 시민운동의 공익성을 편향성으로 대체하려는 시도 중 대표적인 것이 중립성 논쟁이라 할 수 있다. 중립성 논쟁은 시민운동의 핵심을 중립성으로 제한하고, 이를 기준으로 시민운동의 편파성을 부각시켜 시민운동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잠식하려는 담론전략이었다. 이러한 보수언론의 담론전략은 시민사회 내의 보수세력에게는 자기 정당화의 담론적 근거를 마련해 주고, 대다수의 시민들에게 존재하는 정치

협오증을 이용하여 시민운동에 대한 불신감을 조장한다는 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공한 전략이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시민운동 내부에서는 중립성의 성격에 관한 논쟁이 유발되고, 이러한 성찰을 통해 시민운동의 핵심이 기계적 중립성이 아니라 공익성이라는 인식이 나타나면서 시민운동의 방향에 대한 진지한 모색이 나타났다는 점에서 시민운동을 새롭게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한국의 시민운동이 진공 상태의 시민사회로 진입한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탈분화에 의해 엘리트 카르텔이 지배하는 서울중심적, 중앙집중적 시민사회에 진입했다는 사실은 시민운동의 조직구조, 기능 및 성격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권력의 중앙집중성은 역으로 그것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세력의 중앙집중성을 낳는다. 참여연대, 경실련 등과 같은 대표적인 한국의 시민운동단체들이 중앙중심적이라는 사실은 한국적 맥락에 의해서만 이해될 수 있다.<sup>2</sup>

한국 사회가 엘리트 카르텔에 의해 지배되면서 나타나는 중요한 정치적 현상은 국가와 시민사회의 단절 혹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단절이다. 보다 정확히 표현하면 시민사회의 균열구조가 정치사회에 반영되지 못함으로써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서 중요한 정치적 현상들이 의외가 아니라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배경이지만, 이로 인해 시민운동은 '대의의 대행'이라는 독특한 기능을 부여받게 된다. 정치기득권 집단이 시민사회 내의 기득권 집단의 이익만을 독점적으로 제도정치에 반영하게 됨으로

---

2 한국 시민운동이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는 비판은 중앙중심적 운동에는 타당하지 않다. 참여연대는 회비를 통해 독자재정을 꾸리고 있으며, 환경운동연합은 10만에 이르는 회원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이러한 비판은 시민운동에 대한 오해이거나 의도적 왜곡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의 시민운동이 풀뿌리화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시민 없는 시민운동이라고 한다면 이 비판은 정당하다. 1987년 이후 지역시민운동 역시 꾸준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아직은 열악한 수준이라는 평가는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써 정치적으로 소외된 시민사회 내의 다양한 집단들은 시민운동을 통해 자신들의 이해를 대변할 수밖에 없고, 시민운동은 이러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대의 기능의 부재는 시민운동으로 하여금 정치개혁운동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하게 하고, 2000년 총선연대 활동부터 2003년 내내 이루어진 제도개혁운동 그리고 2004년 총선에서의 다양한 유권자 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2000년 총선연대 이후 시민운동에 대한 다양한 비판, 즉 정파적 운동, 시민 없는 시민운동 등등의 비판들은 시민운동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러한 비판이 특히 제도적 공론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보수언론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했다. 그러나 2000년을 넘어서면서 시민사회는 변화했고, 이러한 변화는 시민운동이 보수언론의 비판을 방어하는 데 중요한 방파제가 되었다.

### **새로운 주체, 새로운 시민운동**

시민사회의 변화는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지되기 시작하여 2004년 현재에는 보다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2002년 월드컵에서의 붉은악마에서 시작되어 최근의 탄핵사태까지 이어진 일련의 사태들은 무언가 변화하고 있음을, 그리고 그 변화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붉은악마 현상은 사상 최초의 즐거움의 혁명이었고, 잃어버렸던 광장성의 회복이었다. 또한 여중생 추모집회는 건국 이후 최초의 대중적 반미집회였고, 뒤를 이은 반전평화시위 역시 건국 이후 최초의 대중적 반전평화시위였다. 그리고 파병반대집회가 이어졌고, 그 모든 것이 어우러진 탄핵반대집회가 있었다.

이 모든 최초의 일들은 1987년 이후의 일련의 사건들의 연속선상에 있다. 먼저, 정치적인 변동이다. 민주화, 냉전체제의 종말 그리고 남북공동선언 등의 정치적인 변동과정은 반공규율사회의 핵심이었던 냉전반공의식을 해



체했다. 또한 냉전반공의식의 해체는 그것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비합리적, 권위주의적 의식의 해체를 낳게 되었다. 다음으로, 정보통신혁명이 있었다. 2000년에 들어서면서 본격화되기 시작한 사이버 공론영역의 출현은 쌍방향성을 바탕으로 기존의 공론형성방식과는 달리 참여에 의해 공론이 형성되는 새로운 공론형성과정을 만들어 냈다. 이 공간에서는 특정세력의 정보독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고, 토론에 의한 공론이 형성됨으로써 새로운 의견들이 형성될 수 있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를 통해 발생한 것은 합리적 주체의 탄생이다. 냉전반공의식, 권위주의, 지역주의에 포박되었던 한국의 시민사회는 세대변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합리적 주체가 탄생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합리적 주체의 등장은 해방 이후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보수 일변도의 이념지형에 근본적인 변화를 낳고 있다. 이는 2003년 초에 집중적으로 행해졌던 각종 여론의 이념성향 조사에서 명백히 확인된다.

〈표 1〉 한국인의 주관적 이념성향 변화추이

	보수	중도	진보	성향없음/모름/무응답
2002년 2월 중앙일보	28.5	49.5	21.4	
2002년 5월 조선일보	44.8	26.3	25.3	
2003년 2월 중앙일보	31.6	34.8	34.0	
2003년 2월 KBS	31.9	32.8	34.3	
2003년 4월 동아일보	24.5	31.8	26.0	17.7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03년에 이르면 주관적 이념성향에 있어 보수와 진보는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sup>3</sup> 그리고 그 중간에 40% 정도의 중도세

3 물론 이러한 이념성향은 세대에 따라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동아일보》 조사에 따르면 30대에서는 진보(37.5%)가 보수(21.7%)보다 15.8% 높았고, 20대에서는 진보(31.5%)가 보수(18.5%)보다 13% 높았다. 이에 비해 40대 이상에서는 보수성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KBS의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진보성향이 50~60대의 그것보다 두 배가 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세대별 보수와 진보의 차이는 그 이전의 조사에서도 확인된다. 《조선

력이 포진하고 있다. 이러한 힘의 균형상태는 최근의 탄핵정국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대략 탄핵 찬성과 반대가 70 대 30으로 나타나는 것은 변화하지 않는 보수세력 30과 중도 및 개혁세력의 70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혁과 진보 간의 힘의 균형상태는 한국 사회에 더 이상 침묵하는 다수가 없어졌음을 의미한다. 과거의 반공규율사회 내에서 냉전수구세력의 강력한 버팀목이었던 냉전수구적인 침묵하는 다수가 없어지고, 오히려 보수와 진보 사이에 새로운 침묵하는 다수가 형성되었음을 보여 준다.<sup>4</sup>

시민사회의 이념성향의 변화에 있어 시민운동은 핵심적인 추동세력이었다. 시민운동세력은 사회 전 영역에서의 합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고, 2000년 총선연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시민운동이 합리적 주체 형성에 상당히 기여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구조적 변동과 이로 인한 새로운 주체의 형성은 시민운동에 새로운 과제를 던져 주고 있다.

현재의 국면은 시민운동에 있어 위기이며 기회이다. 현재의 국면이 기회인 것은 시민운동이 추진하는 개혁노력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탄핵국면에서 알 수 있듯이 사회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민들의 증가는 시민운동의 자원이 풍부해졌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적극적 참여계층의 증가가 시민운동의 위기로 이해될 수 있기도 하다. 다시 탄핵국면의 예를 들면, 시민운동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들을 위한 장을 제공했을 뿐 그것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이는 시민운

---

일보)의 2002년 5월의 조사에 따르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수성향이 높아지고, 젊어질수록 진보성향이 늘어남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일보》, 2002.5.3)

4 2003년 시민사회의 변동은 침묵하는 다수의 보수층이 사라졌음을 보여 준다. 그러나 이러한 주관적 이념지표를 객관적 이념지표로 그대로 이해할 수는 없다. 그것은 세계사적으로 볼 때, 한국의 이념지형이 아직도 상당히 우익지향적이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이념지형이 우익반쪽지형으로 형성된 이래 독재정권하에서 반공주의와 그것을 보장하는 국가의 물리력 및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우익적 성향 이외의 다른 성향은 철저히 억압받았기 때문이다.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 이념적 분리가 분배 등의 사회경제적 변수보다는 대북문제, 미국문제로 나뉘어진다는 사실은 이러한 한국적 특성을 잘 보여 준다.

동이 과거에 가졌던 영향력을 상실해 가고 있음을 의미하며, 보다 본질적으로는 시민운동이 2002년 이후 변화된 시민들의 욕망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시민사회운동은 노사모로 상징되는 새로운 정치적 시민과 네티즌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문화적 시민의 욕구와 적절히 소통하기 보다는 그것을 따라잡는 데 급급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 내의 구조변화와 함께 한국의 사회운동 역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먼저, 2004년 총선에서 나타난 다양한 유권자 운동의 만개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운동은 분화하고 있다. 각 부문에서,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요구들은 더 이상 전국적이고 단일한 이슈로 묶을 수 없을 만큼 분화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17대 총선에서의 민주노동당의 약진이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차이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과 이슈를 공유해 왔던 민주노동당의 제도권 진입은 시민운동이 제도정치와의 관계에 관해서 그리고 스스로의 정체성에 관해서 새롭게 고민할 시점에 도달했음을 말해 준다.

시민사회의 구조변화, 그리고 사회운동의 내적 변화로 인해 한국의 사회운동은 1987년 이후의 1차 분화를 넘어 2차 분화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2차 분화는 시민운동 내부의 분화이며, 시민사회의 분화를 반영하며, 동시에 시민운동 밖으로의 분화이기도 하다.

시민운동 내의 분화는 크게 세 가지 경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전문화와 풀뿌리화의 가속화이다. 17대 총선을 경과하면서 한국 정치가 정상화의 과정에 들어가게 되고, 민주노동당이 제도권에 들어감으로써 과거 시민운동이 담당해 왔던 대의의 대행 기능은 점차 그 역할이 축소될 것이다. 이에 비해 시민운동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가될 것이다. 당장 기존의 시민운동이 변화되지는 않겠지만 시민운동이 전문화로 가게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는 특히 중앙 중심의 시민운동을 하는 단체들에게는 더욱 요구되는 사항일 것이다. 전문화와 함께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풀뿌리화이다. 대의의 대행 기능이 제도권으로 어느 정도 이양되면 시민운동은 시민운동의 또 하나의 본령인 풀뿌리화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시민운동은 주민들의 자발성에 기초한 당사자 운동으로 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화와 풀뿌리화 경향은 단기적으로 시민운동의 영향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민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으로 새로운 시민운동의 출현이다. 도시 밀집형 주거구조와 초고속 인터넷의 빠른 보급으로 인해 출현한 사이버 공론영역은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다는 점에서 아직 그 주체 및 방향에 관해 명확한 정의를 내리기가 힘들다. 그러나 붉은악마 현상, 여중생 촛불시위 그리고 탄핵반대시위에서 알 수 있듯이 사이버 공론영역은 보수언론에 의해 장악된 보수적 공론영역을 대체하는 동시에 오프라인에서 행동하는 주체를 생산하고 있다. 또한 그 성격이 어떠한지 간에 대선과 총선 시기에 형성된 노사모와 같은 세력들은 당분간 사회변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사이버 공론영역의 주체들은 기존의 시민운동에 비하여 더 분산적이고 수평적이며 일시적이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사이버 운동이 기존의 시민운동과 순조로운 연대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서 사이버 행동을 통해 새로운 운동을 실험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존재하며, 사이버 공간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이 영역에서 나타나는 운동은 사회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정치세력화이다. 사회운동의 정치세력화는 오래된 주제였고,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 역시 최근에 많이 논의된 주제이다. 민주노동당의 의회진출은 사회운동 전체의 관점에서 이러한 과제 of 실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사회운동의 한 부분인 시민운동 역시 2006년 지방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는 운동정치와 제도정치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시민사회의 요구가 국가로 전달되고 그것이 실현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일이고, 과거 지방선거에 시민운동세력들

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에 비추어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일이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시민운동이 어떠한 방식으로 정치세력화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기존의 제도정치권을 통한 정치세력화이다. 즉,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노동당을 통해 정치세력화하는 방식이다. 다음으로는 독자세력화이다. 현재 녹색정치, 생활정치, 자치운동세력들은 독자적인 정치세력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들의 노력이 다양한 시민운동과 연대한다면 현실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독자세력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의 정치권이 포괄하지 못하는 가치를 실현하려는 시민운동의 독자적인 노력은 이루어질 것이다. 시민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을 택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시민사회의 구조가 변화하였고, 사회운동 역시 변화하고 있다. 시민사회의 구조변동은 시민운동의 변화를 강요하고 있으며, 사회운동의 2차 분화는 시민운동의 분화를 예견케 하고 있다. 한국 시민운동은 지금 전환기에 처해 있는 것이다.

### **압축혁명과 아래로부터의 탈분화**

권위주의 시기 한국 시민사회의 형성원리는 ‘분화와 탈분화의 동시진행’이었다. 다시 말해서 근대사회의 핵심원리인 분화를 국가는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통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통제하고 규율해 왔다. 민주화는 이러한 형성원리에 대한 저항이었고, 그것은 국가 및 경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분화 그리고 시민사회 자체 내의 분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2002년부터의 일련의 과정은 만회혁명의 성격과 압축혁명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과정은 1987년의 복원, 즉 근대적 정상성의 회복을 의미하는 동시에 1987년 이후의 사회구조적 변화가 만들어 낸

문제들의 동시적 해결을 의미한다. 최근의 변동과정의 주체가 네티즌으로 상징되는 새로운 주체라는 점은 압축혁명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 준다. 따라서 향후 시민운동의 방향은 압축혁명적 성격을 가져야 한다.

이제까지 시민운동의 전략은 거칠게 말하면 분화전략이었다. 사회의 각 영역에 침투해 있는 국가의 통제를 물리치고, 사회 각 영역이 독자적인 자기논리를 확립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시민운동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시민운동의 전략이 이러했기 때문에 시민운동의 조직원리 역시 부문운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민중운동의 논리가 전국적인 단일조직에 의한 전국적이고 통일적인 행동이라면, 시민운동은 각 부문 및 영역에 맞는 각개약진 이었고 사안별 연대전략이었다. 이러한 시민운동의 전략은 상당히 성공적 이었지만, 자체적인 모순을 갖는 것이었다. 즉 지속적인 분화 경향이 연대의 약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2004년 총선을 둘러싸고 시민사회운동 진영 내에서 벌어졌던 논쟁에서 알 수 있듯이 시민사회운동은 더 이상 하나의 이슈로 묶을 수 있는 단일한 운동이 아니다. 다양한 영역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시민운동의 발전은 과거와 같은 전국적, 단일 이슈적 흐름의 운동을 점차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분화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의 핵심이 그 다양성에 있다는 점에서 분화는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또 하나의 핵심은 이러한 다양성의 자율적 조정능력이다. '차이 속의 연대'야말로 시민사회의 또 하나의 핵심인 것이다.

국가에 의한 탈분화전략에 대응하여 분화전략은 시민사회의 다원성을 확보하려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탈근대적 탈분화가 새로운 경향으로 나타나고, 현실적으로 분화가 연대를 위협하는 지금, 분화 일변도의 전략은 다시금 재고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나타나는 새로운 시민운동 주도의 탈분화전략, 즉 공간을 중심으로 한 연대, 보다 구체적으로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대전략은 주목해 볼 만하다.

아래로부터의 탈분화전략은 여러 자치운동이 시도하는 도시만들기, 마을만들기, 지역만들기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운동은 하나의 부문운동으로는 불가능하며 다양한 시민운동의 연대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아래로부터의 탈분화전략은 분화된 시민운동의 재접합 시도이며 노동과 여가가 분리된 시민의 삶의 공간을 재접합하려는 시도이다.

아래로부터의 탈분화는 지역을 재구성하는 것만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정보통신혁명의 총아인 사이버 공간에서도 나타나는 경향이다. 사이버 공간은 독자적인 개인들의 집합체임과 동시에 광범위한 네트워크이다. 이 점에서 사이버 공간은 아래로부터의 탈분화 전략, 즉 차이 속의 연대 전략을 구성하기에 적합하다. 인터넷으로 형성된 새로운 주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러한 탈분화전략을 벌써부터 시도하고 있다.

과거의 독재정권이 전국을 중심으로 탈분화전략을 취함으로써 중앙을 특권화했다면, 시민사회는 아래로부터의 탈분화, 즉 지역을 중심으로 한 연대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이것은 시민운동이 추구하는 녹색정치, 생활정치, 자치의 가치에 가장 적합할 뿐 아니라 다양성 속의 연대가 또 다른 중앙주의로 흐를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 영역에서의 탈분화전략은 지역 간의 단순한 분화가 아니라 중앙이 없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에도 적합할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탈분화전략은 시민운동이 추구해야 하는 전문화 및 풀뿌리화가 접합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전략임과 동시에 시민운동의 또 다른 경향인 정치세력화와 시민운동이 접합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지점이기도 하다. ■

---

김정훈 kjhandam@hanmail.net | 한신대 연구교수. 공편저로 『시민사회와 시민운동2』 등이 있고, 주요논문으로는 「전환기의 시민사회와 시민사회운동의 미래」, 「시민운동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과제」 등 다수가 있다.